

# LED조명, KS인증부담 대폭 줄인다

- 안전인증(KC)의 중복시험 면제, KS 인증비용 및 기간 1/2로 -

문의 | 지식경제부 산업표준과(02-509-7294)

- LED 조명관련 중소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11년도 정부규제개혁과제의 하나인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경제부(최중경 장관)에서는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포함하는 KS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 '2011년도 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LED 인증절차 간소화('11.1)
  - ◎ 그 동안 KS인증의 경우 품목당 300만원 이상 하는 시험비용과 2개월 이상의 인증소요기간의 중소기업 고충에 대해 언론보도와 기업현장으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음
  
- 'LED 산업 제2도약전략 (지식경제부 발표, '11.5) 중 동반성장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이번LED 관련 KS인증심사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KC인증을 획득한 LED 조명제품을 대상으로,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시,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 인증비용과 인증기간을 대폭 경감시키는 것임
    - \* KS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기준이상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인증
    - \* KC :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KC기준 이상의 안전요구사항을 의무화한 강제인증
  - ◎ KS, KC 兩 제도 간의 안전요구수준, 시험내용을 고려하여 면제항목을 도출하되, 소비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은 제외되지 않도록 KS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하여 6.15부터 본격 시행됨
    - \* 대상(5품목) : LED(컨버터내장형, 매입형 및 고정형, 이동형, 센서등, 모듈컨버터)
    - \* 면제조건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1년 이내의 최초 KC 인증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KS인증 심사기준에 명시한 중복시험을 면제
    - \* 시험항목 KC(안전, 10~13)와 KS(안전+성능, 17~ 20)의 시험항목 중 7~10개가 중복
  
- KC 안전성관련 중복시험 항목의 면제로 인해 KS인증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대폭 경감되고,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됨

## 〈 면제 효과 〉

- ◆ 시험수수료 : 280 ~ 350만원 → 100 ~ 150만원(50 ~ 70% 절감 효과)
- ◆ 시험기간 : 약 2개월 → 1개월 이내 (50% 단축효과)

-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들도 KC와의 중복시험 면제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할 계획임

# “올 여름 전력수급 비상대책반 본격 가동”

- 2011년은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 전력 수급에 총력 -  
- 6. 20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회의」 개최 -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4900)

- ◆ 올 여름 전력수급 전망: 예비력 420만kW(예비율 5.6%)
  - 최대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7,477만kW 전망
  - 공급능력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7,897만kW 확보
    - ⇒ 공급 예비력은 420만kW(예비율 5.6%)로 다소 빠듯한 수급 전망
- ◆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 공급 예비력 478만kW 추가 확보 효과
  - ① (수급 안정대책) ③ 전기품질 유지 범위내에서 전압 조정(133만kW), ⑤ 약정을 체결한 수요기업의 자율 절전(190만kW)과 한전이 약정한 기업의 부하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105만kW)을 통해 추가 공급 자원을 총 428만kW 확보
  - ② (수요분산) 피크기에 휴가 조치,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 부하관리 가능 수용가를 발굴, 수요관리 참여 약정(약50만kW의 추가 부하 분산 가능)
- ◆ '11년 피크기에 가용 가능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 전력 수급기반이 확립될 경우, '12년부터는 수급 안정화 단계로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
  - \* 예비율 추이(%): ('09) 7.9 → ('11)5.6 → ('12)7.3 → ('13)8.6 → ('14)13.9

- 최경경 지경부 장관은 6. 20일 한전 대회의실에서 한전 김쌍수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 김종신 사장, 남동발전(주) 장동수 사장, 중부발전(주) 남인석 사장,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 등 11개 유관기관장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재욱 회장, 에너지시민연대 박정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 올 여름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였음

## 【 전력수급 전망 】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 여름('11.6~8월) 최대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7.0%(488만kW) 증가한 7,477만kW로 전망되며
  - \* (최대전력 예측 전제) GDP성장률: ('10)6.2%, ('11)4.2%, 기온: 최고 33.3℃, 평균 28.8℃
  - 공급능력은 전년 대비 6.2%(463만kW)\* 증가한 7,897만kW로 공급예비력 420만kW(예비율 5.6%)를 확보하고는 있으나, 보다 안정된 전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을 밝힘
    - \* (공급력 확충) 영월복합(84.8만kW, '10.6), 파주열병합(51.6만kW, '11.1), 포스코복합#5(57.5만kW, '11.2), 신고리#1(100만kW, '11.3) 등
  -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729만kW로서 전체 전력수요의 23.1%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최근 증가세인 냉방 수요관리가 긴요한 시점임을 강조함

## 【 올 여름 안정적 전력수급 대책 】

- ① 피크기에 수급 안정이 필요할 경우, 규정 허용 범위내 전압 조정 및 약정 체결 수용가의 자율 절전 등의 부하조정 방식을 통해 공급여력 428만kW(예비율 5%수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며

◎ 세부적으로는

① 전기품질 유지 범위내 전압 조정: 133만kW 확보

② 사전 협약된 수요기업이 자율 절전조치하거나 한전이 약정한 수요기업의 부하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공급력 확보 : 총 295만kW 확보

③ 현 단계에서 수요관리 억제 가능량(300만kW)이외에 '지정기간제\*' 등의 확대 운영을 통해 50만kW이상의 추가 부하 억제량을 확보할 계획이며,

\*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약정하여 피크기에 여름휴가를 시행토록 하여 전력 피크 억제

④ 전국 대규모 전력 소비사업장의 냉방기 순차운휴(총 6개 권역 구분) 등을 추진하고, 건물 실내온도 제한제 시행은 하계 전력수급 상황, 평균기온, 냉방수요 증가율 등을 모니터링하여 실시여부와 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임

⑤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전력피크 억제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스컴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 TV홍보 1200여회, 라디오 150여회, 지하철(수도권 74천회, 지방 219천회)

◎ '11년 목표인 1만kWh(36만가구의 1개월분 사용량)의 에너지를 절감하여 연탄 1백만장(1만가구의 1개월분 사용량)을 기부하는 '에너지빼기(-), 사랑더하기(+)' 캠페인 등의 범국민 전기절약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특히 7월중에는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이 공동으로 냉방온도 준수,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의 주요 에너지 절약정책 홍보를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임

⑥ 전기재해 취약시설, 재래시장 등 160만여 개소 사전 안전점검 실시 등 예방중심의 전기안전대책을 추진하고, 긴급출동 응급조치를 위한 '스피드콜' 운용 중(☎1588-7500)

■ 설비 예비율은 '12년이후 부터 점차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전망

◎ '12년 예비율은 7.3%, 예비전력 575만kW로서 예비력이 확충되며, 건설중인 발전소가 완공되는 '14년부터는 예비율이 14%이상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다만, 그 시기까지는 수급상황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 등 지속적인 수급 상황 점검은 필요

\* '14년까지 1,145만kW 공급능력 추가 확충 可(예비율 14%)

· 신고리원전 3, 4호기(280만kW) 영흥화력 5, 6호기(174만kW) 등 21기 준공

\* 예비율 추이(%): ('09) 7.9 → ('11)5.6 → ('12)7.3 → ('13)8.6 → ('14)13.9

■ 한편, 지식경제부는 '11.6.27 ~ 9.2일간, 전력수급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전력수급대책본부' (본부장: 에너지자원실장, 한전에는 '비상수급대책반' (반장: 한전 부사장)을 운영할 계획임

■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올 여름 전력 예비율이 5%내외로 그리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나,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관리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하는 한편

◎ 한전 및 6개 발전사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 특히, 최장관은 올 여름도 이상고온 및 경기 활성화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급변에 기관별로 수립한 수요관리 강화, 발전소 및 송·배전망 안전 관리 등의 주요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 충분한 사전점검과 한전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상호협력하면서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하절기 태풍-호우 대비전국 834만개 전봇대 일제 점검

- 전신주·변압기 등 전국 840만 곳 점검대상 -
- 한전, 민간전문가 4,840여명의 점검단 구성 -
- 5분 대기조 운영 등도 병행 전개하여 국민불편 최소화 -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02-2110-4901)

- 지경부(장관 : 최중경)는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정전과 전기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주택가와 도로변 등 생활과 밀접한 전기설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함
  - 전신주, 변압기 등 전국에 설치된 전기설비 840만 곳이 점검대상이며, 한전직원 등 총 4,840여명으로 점검단 구성
  - \* 점검대상 : 전신주(830만기), 첩탑(4만기), 변전소(731개소), 지중화설비(3만개소) 등

- 최근 4년간('07년~'10년) 여름철 태풍 및 폭우에 의한 정전과 전력설비 피해가 컸으며, 특히 작년에는 태풍 "곤파스('10.9.1)"로 168만가구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바 있음
  - \* 태풍 및 폭우피해 정전(만호) : ('07) 90 → ('08) 211 → ('09) 79 → ('10) 267
  - \* 전신주 피해(건) : ('07) 1,086 → ('08) 582 → ('09) 3,114 → ('10) 4,926
  - \* 태풍 '메아리'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 : 11만 가구
  -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경부는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전기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취약시설을 전면 개선하여 이후의 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한다고 밝힘

## ■ 주요 점검·개선 계획

### 〈 전신주 〉

- 주택가 및 도로변에 위치한 균열 및 기울어진 문제 전신주 전면 교체 및 보강
- 전국 87만 그루의 나무를 대상으로 가지치기 등 정리작업을 실시하여 나무에 의해 전신주가 넘어지는 불안요인을 전면 제거할 계획임
- 특히, 통신선이 전신주에 과도한 하중을 주거나,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도 개선하여 최근 사당동 전신주가 넘어지는 사고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 ※ 기 설치된 통신선 등의 장력을 체크하여 기준치 이내로 조정하거나, 통신선에 철타도록 조치할 계획

### 〈 송전첩탑 〉

- 일부 송전첩탑 강도를 1단계 상향조정하고, 166기의 첩탑을 교체 또는 보강을 실시
- \* 설비보강 계획(11년) : 첩탑보강 74기, 첩탑기반 보강 70기, 첩탑교체 22기
- 송전첩탑 손상 등으로 만일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신속한 전력공급 복구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 신속복구 체계로 운영

- ◎ 정전에 의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41개 배전센터와 186개 지점에 사고 및 정전 접수 후 5분내 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
- ◎ 내년부터는 전국 전기공사업자를 이용한 보다 더 빠른 출동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임

■ 전기안전 캠페인 전개

- ◎ 전기시설물 및 전기기기 등에 의한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 과 '전기안전공사' 공동으로 "전기안전" 캠페인 전개할 계획임
- ◎ 정전 및 전기사고 발생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전기설비 인근 통행 및 전기기기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
- ◎ 특히, 고도가 높은 차량의 도로주행 시 전기시설물과의 접촉사고가 빈발함을 알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홍보
  - ※ 전기고장 신고번호 : 국번 없이 123번

## 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 101개사 정기감독 받는다

- 1,000대 건설업체의 2010년도 환산재해율 0.41% -
- 평균재해율 이하 업체 356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 적용 -

문의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02-6922-0951)

-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 \* (이하 '평균재해율')이 0.41%로 밝혀졌다  
\*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재해율
- 고용노동부가 조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한 건설업체의 재해발생 현황에 따르면
  - ◎ 2010년도 1,000대 건설업체의 환산재해자수는 3,728명으로 2009년도 3,982명에 비해 254명(6.4%) 감소하였고, 평균재해율은 2009년의 0.50%보다 0.09%p(18.0%) 감소하였다.
  - ◎ 이는 '10년 건설근로자 월평균 임금액의 감소\*와 공사실적액 기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의 증가(15.3%), 사망자(15명, 6.8%)와 부상자(78명, 2.8%)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 \* 건설업 월 평균임금 고시('09년 3,332,820원 → '10년 2,844,682원(14.6% 감소))
    - △ 환산재해율 = [(사망자수×10+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 상시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 건설업월평균임금 × 12월

공공도동부는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0위 업체를 1군, 101~ 300위 업체를 2군, 301~600위 업체를 3군, 601~1,000위 업체를 4군으로 분류하여

각 군별로 재해율이 높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101개 업체\*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해 올 하반기중에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재해율이 동일한 1개업체가 추가됨(1군 11개 업체, 2군 20개 업체, 3군 30개 업체, 4군 40개 업체)

- 정기감독 실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즉시 입건, 수사하며
  - 과태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 참고 : 정기감독 실시 기준 】

####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감독대상)

① 정기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규정에 따른 환산재해율을 산출하는 건설업체로서 전년도 환산재해율이 규모별 하위 10퍼센트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중인 건설공사(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인 경우 주관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최근 1년간(전년 7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고성 휴업재해자(요양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가 없었거나, 해당 연도 말까지 완료 예정인 건설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 한편, 평균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 356개사는 '11.7.1부터 '12년 6.30까지 1년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게 되며,

\* 평균재해율 대비 0.25배 이하인 업체 149개사는 +2점, 0.25배~0.40배인 48개사는 +1.7점, 0.40배~0.55배인 48개사는 +1.3점, 0.55배~0.70배인 40개사는 +1.0점, 0.70배~0.85배인 34개사는 +0.7점, 0.85배~평균재해율 이하인 37개사는 0.3점 가점부여

- 재해율이 높은 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3~5%의 감액을 받게 되는데
  -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면서 2배 이내인 134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3%, 2배를 초과하는 409개 업체는 5%를 감액한다.

■ 아울러,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업체는 향후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및 정부, 공공기관 등의 포상시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각 군별로 재해율이 낮은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255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은 향후 1년간 지도·감독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고

※ 상위 10%가 255개(26.0%) 업체인 이유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낮은 업체에서 무재해 업체가 많기 때문임  
 - 재해를 불량업체(101개사)에서 시공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감독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시동 걸렸다!

## - 산학연과 소비자 합동으로 전기차 충전시스템 관련 KS 3종 개발 -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02-509-7274)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필수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학·연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충전시스템 관련 KS 3종을 6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 이번에 고시되는 충전시스템 표준은 지난 2010년 수행된 전기차 관련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정된 민간 표준과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현대기아자동차, LS전선, 한국전기연구원 등 전기자동차 분야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결과물로서
  - ◎ 주택, 주차장 등에 설치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설비인 '충전기'의 전압 및 전류, 전기적 안전성 등과 전기차와 충전기를 접속하기 위한 장치인 '충전 커플러'의 형상, 감전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전기차 보급시 실사용자인 소비자의 표준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3개 소비자단체에 충전기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KS에 반영시켰다.
  - ◎ 기존에는 소비자가 충전 케이블을 항상 차에 싣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케이블을 충전기 주변에 보관하는 내용을 KS에 추가하여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 이번 KS 개발은 친환경 무공해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자동차 4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 ◎ 특히,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보급에 시급히 필요한 국가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은 올해 1월부터 KS 개발을 착수하여 지난 6개월 동안 공청회 등 총 18회의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국가표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 ◎ 향후 급속 충전시스템을 포함하여 배터리, 차량성능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오존 배출농도가 높은 전기용품 개선명령 조치

## 개선명령 4개제품, 자발리콜 1개제품 -

문의 | 지식경제부 제품안전조사과(02-509-7250)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시중에 유통된 야채과일 세척기·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 발생 전기용품(1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4개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다.
  - \* 오존 발생 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 국내에서 판매된 오존을 이용한 전기용품의 오존 배출농도가 기준보다 높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관련제품을 시험평가함
- 현재 우리나라 전기제품중 오존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발욕조·반신욕조 3개 제품에서 0.05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
  - 살균기·야채과일세척기 등과 같은 오존발생 제품에서는 오존배출농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이는 국제적으로 오존사용 제품이 드물고, 국내에서도 최근에 제품이 개발되었기 때문임
- 오존관련 국제기준은 일반적으로 대기중 농도 기준 0.1ppm 이하임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 0.06ppm이며, 1시간 평균은 0.1ppm으로 미국 등과 유사함
  - 미국 노동부의 근로자 작업기준도 8시간 가중평균 0.1ppm이며, 단기간 노출기준은 0.3ppm 이하(근로자가 1회 15분간 노출되며 노출간격이 1시간 이상이고 1일 4회까지 노출이 허용)
    - \* 한국 근로자 안전기준은 미국과 동일함
  - 한편, 미국 FDA의 의료기기 오존 발생 허용기준은 0.05ppm임
- 금번 기표원 시험결과와 동 제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제품과 근접한 위치에서(20~30cm) 측정된 오존 발생량으로
  - 모델명 "HS-102, SOZ-ADC1, Taize, 오투플러스" 4개 제품은 살균 또는 탈취를 목적으로 오존을 대기중에 살포하는 방식의 오존 발생기로서, 배출 오존농도가 1ppm 넘는 제품이 많음
  - 동 제품의 사용중 발생하는 근접지점의 오존의 농도가 1ppm 이상이라도 동 제품의 사용중 주변공간의 오존농도가 반드시 0.1ppm을 넘는다고 할 수 없지만,
  - 동 제품들은 높은 오존발생이 사용목적상 불가피한 것이나 이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공지되거나 일반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이 부족함
  - 따라서, 동 제품들에 관해서 오존의 유해성과 사용상 주의 사항을 제품에 부착시키는 개선조치를 명령하기로 함
- 그리고 공기중에 살포하지 않고 용기내에서 오존을 사용하여 살균하는 야채·과일 세척기중 모델명 OKP-9630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1ppm을 초과하여 수거를 권고하며
  - 0.1ppm을 초과하나 0.3ppm 이하의 오존이 발생한 모델명 LMW-9030, CC-001은 그 유해성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이 동제품을 장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근접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업체에게 자발적인 수거를 권고하기로 함



- 특히, 기표원은 급변 안전성 조사를 계기로 오존 발생 전기용품에 대한 오존 배출농도에 따른 위해정도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한편

◎ 오존을 사용하는 신제품의 오존 발생기준에 관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오존발생 허용기준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함

배출오존농도(ppm)	노출시간	가능한 인체 증상
0.01 - 0.04	-	냄새 감지
0.1	-	약한 눈, 코, 목 자극
> 0.1	수 분	지속적 두통, 숨가쁨
0.25 - 0.5	2 - 5 시간	폐기능 및 신체 작업능력 감소
> 0.6	2 시간	가슴 통증, 마른 기침
1	1 - 2 시간	기침, 심한 피로
> 1.5	2 시간	사고능력 저하, 지속적 기침, 극도의 피로
9.0	간헐노출	심각한 폐렴

\* 자료출처 :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오존농도별 가능한 인체 증상

- 급변 조사결과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 골프장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02-2110-4873)

- 서울행정법원이 금일(6월 24일) 대중 골프장 36곳이 제기한 골프장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에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동 조치에 대한 효력이 본안 판결 때까지 일시 정지되었음
- 지난 3월8일부터 시행 중인 야간조명 사용제한 조치는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억제하고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임
-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은 골프장(대중 골프장 36곳)의 야간 조명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나,
  - ◎ 다른 골프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타 골프장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 전까지 단속을 일시 중지기로 하였음
  - ◎ 다만, 골프장 이외의 기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예정임
- 지식경제부는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에너지절약에 대한 중요성과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적절성을 입증하여 급변 조치가 적법한 조치였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도록 할 계획임